

광주·전남 마약중독 ↑...적발 어렵고 치료기관 부족

광주 지역 암수 필로폰 3년간 62g→298g 5배 증가

수사망 피하기 위해 가상계좌 이용해 마약 밀거래

광주·전남 지역 젊은 층 사이에서 항정신성 약물 과다 복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물밀 거래·유통이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데다 약물 중독자들을 치료할 기관도 턱없이 부족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수된 필로폰(항정신성의 약품)은 ▲ 2019년 62g ▲2020년 347g ▲2021년 298g 등으로 최근 3년 사이 5배 가량 늘었다.

5·18 진상규명 광주지원위 13일 위원장 선출 등 논의

5·18 진상규명 광주지원위원회 회의가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주지원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5·18 진상규명 조사 위원회의 진상규명 과제를 지원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다.

또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보고, 조사활동에 대한 광주시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 할 예정이다.

실무위는 5·18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7명을 추천 받아 구성됐으며, 조사위에서 요청하는 과제와 광주지원위에서 제안한 사안에 대해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구체적인 과제 범위와 참여 방법은 앞으로 있을 실무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조사 지원을 위한 지원기구 설치와 인력 지원, 진상규명신고센터 운영, 진상규명 과제별 기초자료 제공 등 진상규명 조사활동 지원방안을 보고하고, 진상규명 조사활동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규명 조사위의 조사활동 기한 연장을 국회에 의안으로 제출할 것을 공식 견의할 예정이다.

정신 5·18선양과장은 “지금이 5·18 역사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소중한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지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흥을 돋구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내고 마약류를 구매, 복용한 뒤 클럽에 입장하거나 삼삼오오 술자리를 갖기도 한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20대 남성들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남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각자의 자택에서 알약 형태의 항정신성 물질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에 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다.

현재 젊은 층 사이에선 이른바 항정신성의 약품의 일종인 이른바 ‘물뽕’, 캐타민, 엑스터즈 등이 유행처럼 변지고 있다.

료가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마약 거래책들이 해외에서 약물을 밀반입한 뒤 전자(가상) 화폐를 이용해 약물거래를 하고 있어 수사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약물 중독을 치료할 기관과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마약퇴치본부 광주·전남지부는 매달 10여 명의 약물중독자를 상담하고 있지만, 중독 치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현재 전국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시설로 지정된 곳은 21곳이다. 이 중 광주·전남권 지정 병원은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국립나주병원, 단 2곳 뿐이다.

/김용범 기자



안전모 착용 캠페인 협약식

11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 안전모 착용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식’에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장 등 유관기관장들이 안전모 착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자치경찰 출범 1년, 시책 발굴 성과-공감대는 ‘숙제’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 등 100개 안건 심의

광주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시책 발굴에는 적잖은 성과를 냈으나, 자치경찰제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초기 제도 개선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11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호남권 최초로 지난해 5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 7월에 공식 출범한 광주자치경찰위는 그동안 실무협의회

6차례, 정기회의 22차례 등 모두 28차례 회의를 열어 10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출범 직후 제1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의결한 이후 전날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시민경찰학교 운영계획

▲온·오프라인 연계 성매매 집중 단속 ▲코로나19 유흥시설 특별단속 결과까지 총 8차례 정기회의에서 모두 79건이 의결됐다.

위원회는 출범 후 1년 동안 치안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며 적잖은 성과를 냈다.

우선, 기존 경찰의 조직과 체계를 유지하는 불완전한 자치경찰제 속에서도 조직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과 일선 경찰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치안시책을 발굴·추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한 법규 위반 단속과 시설 개선을 추진했다.

/김용범 기자

국가 AI데이터센터, 추가 패키지 서비스 개시

단독스토리지·가속기·빅데이터 AI플랫폼 기반 체험

을 개발하고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대학·공공기관 등을 모집한다.

기존의 국가 AI 데이터센터 컴퓨팅 자원 서비스 이용자도 신청 가능하다. 광주 소재 인공지능 기업, 본사·지사·연구소를 광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기업 또는 인공지능 집적단지사업 참여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본격 지원하게 될 AI 데이터센터 수요 맞춤형 서비스는 기존 AI학습 중심 지원원에서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제품 개발부터 AI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수집·가공·분석에 필요한 스토리지 단독 상품, 학습 모델 개발 완료에 따른 상용화 수준의 오픈베타 서비스까지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권형안 기자

‘청정·힐링·안심 쉼터’ 전남으로 오세요

전남도, 내달 14일 목포서 ‘방문의 해’ 선포식

전남도는 오는 6월 14일 목포 유달유원지에서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대내외에 알리는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문의 해 주제는 ‘청정·힐링·안심 쉼터, 전남으로 오세요’다.

전남도는 10일 행사·축제 관련 전문가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착수보고회를 갖고 프로그램 운영과 퍼포먼스 계획 등 영향력 있는 선포식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2022~2023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박종배 기자

‘임 행진곡’ 수록앨범 전곡 공연·라운드테이블

광주비엔날레재단·광주영화영상인연대 협력 무대

5·18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조명하는 포럼과 노래 전곡이 수록된 앨범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13일과 14일 광주 뮤풀리와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광주풀리 x 로컬가락(歌樂)–내력 없는 소리’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부제 ‘내력 없는 소리’는 전라도 사람들이 황망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사용하는 말에서 차인했다.

/김도기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삶이 행복한 광산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30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84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